

지방자치·종합

광주 동구청장 보선 과열 양상

민주 탈락 일부 후보들 무소속·새누리 후보 출마

민주 최종 경선 앞두고 예비후보간 공방전도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2차 첫오프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들이 '원칙 없는 경선' '특정 후보 사전 내정설' 등을 주장하며 무소속 또는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강행, 동구청장 보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2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1차 첫오프에서 탈락한 최정원 전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새누리당 후보로 동구 보선에 나선다. 최 예비후보는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첫오프에서 탈락한 조용진 예비후보도 조만간 민주당을 탈당해 '깨끗한 동구'를 내걸고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행정 보다는 조직이 우선인 광주 동구를 변화시킬 계획"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준비중이다.

앞서 1차 첫오프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양혜령 예비후보도 조직을 정비하고,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과 연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보선 26곳, 대선과 동시 실시

경남도지사·서울교육감·기초장 3곳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같이 실시될 재·보궐선거 지역이 총 26곳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재·보궐선거 지역은 광역단체장 1곳,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19곳 등이다.

광역단체장은 민주통합당 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사직함에 따라 경남도에서 보궐 선거가 실시되며, 교육감 선거는 광역권역에서 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11월 25~26일), 부재자투표(12월 13~14일), 후보자 흥보율 발송기한(12월 5일까지), 투표시간(오전 6시~오후 6시) 등은 대선 일정과 동일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선 부재자

21~25일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1~25일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선거권에 따르면 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22만2389명

첫 대통령선거 참여

재외국민 22만2000여 명이 현정 사상 처음으로 내달 1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뒤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친 결과 추정 선거권자(223만3695명)의 약 10%인 22만2389명으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한국시간 기준) 마감한 재외국민 선거 신고·신청자수(총 22만3575명)에 비해 1186명 줄어든 것이다. 지난 4월 재외국민 총선 때의 12만3571명보다는 10만 명(80%) 가량 늘어났다.

/연합뉴스



"지방분권 확대하라"
전라남도의회(의장 김재무) 의원들이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기초의원 지방분권촉진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기능 및 지방분권 9가지 기능을 확대하라!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임) 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 교육비 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임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글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광장용지, 임야등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아지 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암)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 검색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균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이자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 전답, 임야등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범나루발 1만평 P당 3만원
- 광주 신기자구 일반상업지역 대지 194P P당 330만 원
- 장성 백양사입구 모델 및 식당(상업용지 1800㎡, 매기 18억)
- 영광군, 읍, 자동차정비공장 20년간 유통용, 자동차점차정비점, 매기 6억
- 화순 이양면 초방리 일(77.727㎡, 23,512평) 매기 1억
-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및 종공업지역, 1천4백P, 2천5백P, 2만P 등(각종 공장 및 기사용 가능)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 590P, 중심상업지역 매기 24억
- 화순군 동면 성서리 호수부근 대지 210P 매기 1억3천만 원
- 국군군 오산면 조양면 조양리 대지 400P, 매기 400만 원
- 오늘 품 3층신축건물 매기 11억, 월보 595만원(월수 6백만 원)
- 장성 남면 2층주거지역, 전 200P, 창고, 공장, 주택등, 매기 1억
- 광주 우산동 4층원룸 매기 16억 월수 6백만 원
- 영광군 홍농읍 주유소, 대지 400평 매기 5억
- 복구 중봉동 원룸 3층원룸 매기 4억 월수 250만원(인접별도)
-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입구 주유소, 대 919㎡, 매기 4억5천만 원
- 광주 오치동 아파트 밀집지역 5층상가, 대 168P, 매기 17억

구합니다!(매수자대기)

철강공장부지 1~3천평 (담양 대전천부근 8.8M이상도로)

담양, 봉산면부근 공장부지(천평)(대형차량진입기능)

소나무 좋은 임야 1만평이상(장성·화순·담양·함평·곡성 등)

광주시내 수익성 있는 삼가점 2~18억

광주, 첨단 2지구내 병원신축부지 150평~300평

개인소유 저수지 3천평이상

전남, 전북일원 폐교부지 3천평이상

도로이전 및 경관좋은 임야 1만평이상

일률 신축부지(광산구 신정동 및 신가·하남·첨단지구 등)

기타물건다량보유-전화상담바랍니다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0/P 층)

광주 오수관거 공사 주택피해 심각
사회단체 보조금 자부담 기준 고무줄

강은미·문상필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경우도 있다"며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정기관 입맛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오수관거 분리사업 과정에서 주택 피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광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자부담 기준이 없어 자부담 비율이 '들쭉날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강은미(진보정의·서구 4) 광주시의원은 20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임대형민간투자(BTL) 사업으로 추진중인 오수관거 분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3년간 3769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이중 군율·침차 등 562건의 주택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책임행정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수관거 공사로 인한 민원과 주택피해는 1년에 약 1200건, 180

건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광주시는 보조금 사업 비집행과정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도 '유리알카드' 사용만을 고집해 1000원, 2000원을 결제해 해도 대형마트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상필(민주·북구 3) 광주시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2년간 광주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성격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0%에서 최고 1780%까지 달렸다"며 "자부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일부는 자부담을 줄이려고 사업비를 과다정책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정기관 입맛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광주시는 보조금 사업 비집행과정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도 '유리알카드' 사용만을 고집해 1000원, 2000원을 결제해 해도 대형마트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다"며 "1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계산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적 내용을 적극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은 2011년 197개 사업에 9억8800만원(자부담 16억8500만원), 2012년 187개 사업에 9억원(자부담 7억7900만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리운지

강지원 "5년간 정부지출 예산 동결"

무소속 강지원 대선 후보는 20일 "집권 5년 동안 정부의 지출 예산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날 종로구 국민소통센터에서 정책콘서트를 열어 "정부 자신부터 균형질약하고 성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기업이나 가계도 따라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복지예산도 기준의 예산범위 내에서 항목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해결하겠다"며 "필요하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킨 뒤 공평 과세를 통해 세금을 걷고, 그때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주홍 "文-安 지지 자유롭게 해야"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20일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중 자유롭게 지지대상을 선택하도록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의원 67명이 지난 16일 두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할지에 대한 자율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협약 의원이 이에 동조한 첫 사례로, 당 주류측은 2009년 '후단 협약'(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사태에 준하는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주류 초선인 황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전직 의원 67명의 기자회견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당한 주장,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동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 후보를 적으로 본다면 지지하는 것이 해당행위겠지만 함께 안과 가야할 동지로 본다면 (지지하는 게) 정당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시민캠프 "與 탕평인사 말뿐"

민주통합당 광주시선대위 시민캠프는 20일 군상인사 호남출신 배제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박근혜 후보가 탕평인사를 펼치겠다는 것이 말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민캠프는 "이처럼 철저하고 노골적으로 호남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호남 차별을 넘어 '호남 학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탕평인사를 운운하며, 황우여 대표까지 상주시키면서 호남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캠프는 "결국 호남 장성·씨 말하기"는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며 "이명박 정부와 별다를 것 없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감언이설과 거짓으로 포장해 염치없이 지지를 호소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진심포럼, 일자리 창출 토론회

광주진심포럼(상임대표 범희승·전남대 의대교수)은 20일 광주시의회 4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